

TPP 이익, 일본이 최대 수혜자*

- 현재 11개국이 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TPP는 가장 선진국형 FTA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, 일본이 참가하여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최대수혜자는 일본이 될 것임
- 중국을 중심으로 한 RCEP과 TPP가 동시에 실현되는 경우, 그 이익은 한층 더 커질 것이며, 나아가 FTAAP로 발전적 통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임
- TPP참가와 관련하여, 일본이 대처해야 하는 것은 농업과 일부 서비스 부문의 피해, 제조업공동화 등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불식하고, 구조개혁을 통해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것임

* 본 내용은 PeterA. Petri(미국 브랜다이스대학) 교수와 MichaelG. Plummer(미국 존스 홉킨스대학) 교수가 2013년 1월 28일자 「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 : TPP은혜, 일본이 최대」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

□ TPP(Trans-Pacific Partnership :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와 RCEP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: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) 쌍방 참가를 목표

- 아베 정권이 경제재생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지만, 금융재정만으로는 성장을 지속시킬 수 없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며, 무역정책은 구조개혁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음
- 일본은 세계 4위의 수출대국인데도 무역정책면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라이벌 국가들에도 뒤처지고 있음
 - 한국은 2003년에 주요 무역상대국들과 자유무역을 실현시키기 위한

로드맵을 작성하여 이를 거의 완벽하게 해내고 있음

* 미국, EU, 아시아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, 작년 말까지 중국과 4차례 교섭

- 이번에는 일본 차례로 많은 기업인, 학자, 정치지도자들이 TPP를 비롯한 지역무역교섭 참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
- 무역정책은 경제재생,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 조성, 일본의 지정학적인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임
- 더욱이 정부지출은 거의 필요 없으며, 자민당은 선거전에서 TPP참가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나, 현재는 현명한 결단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
- TPP교섭은 최근 3년동안 크게 확대, 참가국이 당초 4개국에서 11개국으로 증가
- 21세기형 협정으로서 설계된 TPP는 경제통합의 무역 분야를 거의 망라한 수준 높은 내용으로 대외직접투자, 경쟁정책, 지적재산권 보호, 서비스 및 무역촉진 등의 항목을 포함하게 될 것임

*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게는 이들 모두가 중요

□ 일본이 TPP의 최대수혜자

- 일반균형모델을 사용한 계측결과로 보면, TPP참가 교섭중인 11개국에 일본이나 한국을 추가한 1개 국가가 참여하는 TPP가 실현되는 경우, 일본이 최대수혜국이 됨
- TPP참가로 일본의 GDP는 2025년에 2.2%, 금액으로는 1,190억 달러, 수출은 14% 증가
- 이와 같은 증가분의 일부는 TPP의 중심인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투자자유화에 의해 발생하며 이것이 외국인투자 증가, 공업제품 수출 증가,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

□ TPP·RCEP 쌍방 가입효과 한층 증가, FTAAP로의 통합이익도

- TPP의 예상이익은 RCEP의 예상이익보다 25% 큼
 - RCEP도 960억 달러의 GDP증대효과가 기대되나 RCEP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중국 등 많은 국가들과의 교섭 여하에 따르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임
 - 그만큼 시간도 소요되고 아시아 각국이 꺼리는 자동차 등 중요 항목이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임
-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TPP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
 - TPP의 규정이 엄격한데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상호 FTA를 체결했더라도 북미와는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TPP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
- 그렇다고는 하나 TPP와 RCEP의 경제적인 이익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임
 -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TPP와 RCEP 쌍방 참가를 목표로 하더라도 양자는 합쳐지는 것이지 지역을 2개로 분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
 - 2중 전략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은 한층 크고, 더욱이 일본의 경우에는 GDP가 약 4% 증가하게 됨
- 미국과 중국 양국이 TPP와 RCEP에 참가할 가능성은 적고, 당분간 중국은 RCEP에 미국은 TPP에 가입하게 될 것임
 - 그러나 2개의 협정이 모두 제대로 작동을 할 경우, 미국과 중국

에게는 지역 전체에 걸친 아태자유무역권(FTAAP)으로의 발전적 통합이 매력적인 선택대안이 될 것임

□ 구조개혁에 의한 이익으로 피해계층을 지원

- 이와 같이 이점이 큼에도 불구하고,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일본과 여타 국가에서도 반대론이 적지 않음
 - 구조개혁에는 반드시 희생을 수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, 미국에서는 수송기기의 생산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나 서비스부문이 확대되어 충분히 보상받을 것임
 - 또한 변화는 10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주요 산업에서 통상 노동자의 이동에는 최소한의 영향밖에 미치지 못할 것임
- TPP를 비롯한 무역협정에 대한 반대론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무역협정을 중단한다고 하여, 기술이나 글로벌경제의 변화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단순히 조정을 늦출 수 있을 뿐임
 - 올바른 정책이라 함은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 잘 해나가는 것으로 변화가 가져오는 이익을 손해를 입은 경제주체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 해법임
 - 그러나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정치적으로 어려운 대응이 필요함

□ 지나친 과장과 우려는 적극적인 무역정책으로 대응해야

- 일본이 주로 대처해야할 문제는 3가지로 집약됨
 - 첫째, 농업종사자들은 계속 강하게 반대할 것이나, 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현재 농업정책은 신규 사업에 제한적이며 젊은 층의 참여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

- TPP에 참가하면 농업이 서서히 퇴보하겠지만,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수송기계와 서비스 분야에서 그보다는 훨씬 큰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력이 있으면 모든 당사자들을 이롭게 하는 타협을 실현시킬 수도 있을 것임
- 둘째,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조업의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으나, 서비스부문이 일본경제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
 - 이는 모든 선진국들에 공통적으로 보여 지는 경향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임
 - 이 과정에서 무역의 역할을 축소되고 현재 상태로는 인구의 고령화, 소비패턴 변화, 제조업의 생산성향상이 훨씬 중대한 문제임
 - 여러 형태의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, 일본은 생산성이 낮은 의류, 신발, 전자제품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며, 특히 RCEP이 실현되면, 아시아에서의 경쟁격화로 그 영향이 한층 커질 것임
 - 그러나 제조업 전체로 보면, 효율적인 분업을 가능케 하여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것임
- 셋째, 일부에서는 TPP에 참가하면, 미국형 의료서비스에 밀려 일본의 의료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음
 - 미국의 제도상 문제점은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거의 없으나 선진적인 의약품을 선택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, 일부 의료서비스와 보험시장개방이 요구될 수는 있음
 - 미국의 교섭담당자에 의하면, 일본에게 국민보험제도 변경을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임
 -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의 협정 자체가 점차 경쟁력을 강화시켜온 일본의 제약회사를 외국기업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지적임

- TPP교섭국들은 이미 15차례나 교섭을 마쳤으나,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직 결정되고 않고 있음
 - 미국의 정치일정상 2013년이 고비로 금년 중에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의회 통과는 매우 어렵게 될 것임
 - * 일본이 참가한다면 협정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
- 일본의 재생은 얼마나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는가에 달려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TPP를 비롯한 무역교섭 참가의사를 조속히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정책이 필요함
- 이와 같은 전략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아베 정권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재생의 기반을 쌓기 위한 좋은 기회를 확고하게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함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3.1.28)